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내년 3월 15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등 체계적 대응 최선

전주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기습적인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제설 대책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겨울 자연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재난 안전 통합플랫폼을 통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황전파·공유 △제설 전진기지 구축, 제설 장비·자재 사전확보 등 도로 제설 대책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지원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폭설과 도로 결빙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전주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재난상황실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전주시 재난안전통합

플랫폼과 CCTV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의 CCTV 영상 등을 연계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는 터널 진출입로, 경사로 등 한파와 강설 시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예찰 및 사전 제설에 임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한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 복구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 지원, 버스정류장 방풍 천막 설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한파특보 시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철저한 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예방 중심의 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재난문자 표준안을 마련, 대중교통과 재난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속한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전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소독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북대병원, 건강한 삶 위한 동행

주거취약가구 대상 방역 소독 활동 나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소독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료과는 방역장비를 활용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해충 방제 및 소독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생 관리 활동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6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참여한 가구들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지선 공공부문 부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은 단순

히 물리적인 지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공공의료의 확장"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와 협력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향후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탄소난방 매트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지원 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번 방역 소독활동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함께한 지역 사회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옛 '메이데이' 월정기권 기한 내 이용 당부

사용 기한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회원 등록 시 이후에도 잔여기간 사용 가능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옛 '메이데이' 사우나 월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까지라며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옛 메이데이 사우나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월정기권을 구매한 회원들이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주시로부터 운영을 위탁해 올해 2월 1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재

개장한 공단은 옛 메이데이 회원들이 기존의 월정기권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옛 메이데이 월정기권의 사용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올해 12월 31일까지를 사용 기한으로 정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회원 등록을 하면 잔여기간만큼 이후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옛 메이데이 일일 입장권의 사용 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옛 메이데이가 문을 닫기 전에 월정

기권을 구입한 회원은 600여 명이며, 이 중 300여 명이 기존의 월정기권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이다.

나머지 300여 명은 아직 월정기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월정기권 사용 기한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기한 내 이용하거나 회원 등록을 할 것을 요청했다.

김계현 복지환경부장은 "월정기권을 구매한 옛 메이데이 회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롯데백화점 인근 사거리 'LED 전자게시대' 설치 추진

전주시가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내걸리며 도시미관을 저해해온 불법 현수막 등을 뿌리뽑기 위해 LED 전자게시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광고를 난립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백화점 인근 통일광장 사거리에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4년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추진된 다.

LED 전자게시대는 내년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상업광고 및 공공광고가 표출될 예정이다.

시는 LED 전자게시대가 운영되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현수막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LED 전자게시대 설치의 불법 현수막 근절 및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홍보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가로등·가로수 쓰러졌다 전북서 최대 77km/h 강풍... 피해 잇따라

전북지역에 새벽부터 최대 77km/h의 강풍이 몰아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전북에서 23~77km/h(6.4~21.5m/s)의 강풍이 불고 있다.

주요지점의 하루 최대 풍속 현황은 무주 설천봉 77km/h(21.5m/s) 군산 말도 69km/h(19.1m/s) 고창 51km/h(14.3m/s), 김제 심포 51km/h(14.3m/s), 부안 새만금 46km/h(12.7m/s), 정읍 44km/h(12.2m/s), 순창군 33km/h(9.3m/s), 익산 32km/h(8.9m/s), 임실 신덕 30km/h(8.2m/s), 진안 동향 28km/h(7.9m/s), 완주 25km/h(6.9m/s), 남원 24km/h(6.8m/s), 장수 23km/h(6.5m/s), 전주 23km/h(6.4m/s) 등이다.

특히 이날 전북에는 순간 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군산시 시흥동에서는 간판이 떨어지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식도동에서는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에 걸렸고, 익산시 금마면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졌다. 이밖에도 부안, 완주, 전주, 김제, 정읍 등에서도 간판과 가로수 등이 쓰러지거나 위험해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전주시상지청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한 간판과 비닐하우스, 낙과 등 실의 설치 시설물을 점검하고 농작물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